

## ※첨부 자료 : 주제별 평가 및 상세 근거 설명 자료

(A 매우 긍정적 영향, B 긍정적 영향, C 변화 없음, D 부정적 영향, E 매우 부정적 영향, ■ 관계 없음)

10대 주제	주요 세부 주제(평가)	평가 기준					종합 평점
		1.입시 경쟁 고통 해결	2.사교육비 경감	3.교육 격차 해소	4.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기타	
1.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C	C	B	B		C
평가 세부 설명	<p>▲우리 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가 입시경쟁교육 체제인데, 입시경쟁 고통 해결 없는 디지털 교육혁신은 앞뒤가 바뀐 혁신 과제로 입시경쟁 고통 해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p> <p>▲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 개별 맞춤형 교육 체제를 지향하지만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는 개별 맞춤형 학습 상품들이 즐비하므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크지 못함. 현명한 사교육 선택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비용 경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학령기 진입 등 초중학교 저학년의 경우 디지털 기반 학습 확대가 홍보되면서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확장되고 있음.</p> <p>▲학생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생 상황에 대한 진단·과약과 학습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음. 교육격차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 플랫폼은 하나의 도구일 뿐임. 실제 학업 성취에 뒤처진 학생일수록 개별적인 만남과 학생의 필요에 따른 교사 지도가 더 중요한 학생들임. 그러므로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디지털 기반 교육이 만능 도구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부적절함.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격차 유발, 교육 환경에 대한 격차 등은 줄어들 수 있어 중상위권 학생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자기주도학습이 되지 않는 하위권 학생에게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p> <p>▲디지털 기술 기반 교육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시대적 요구이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함. 그러나 스마트 학습지 특유의 디지털화된 반복적 문제풀이식 또는 학원식 첨삭 지도 방식이 수업에 도입될 경우 구시대적 문제풀이식 획일적 수업이 확산될 우려도 있음.</p> <p>▲종합해 보면, 미래사회 대비 교육의 질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충분한 조건이 되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요소의 한 가지는 될 것임. 다만</p>						

디지털 기반 교육이 미래사회 교육의 질로 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외에, 문제해결력, 소통능력, 자율적 판단 등 근본적인 능력을 키우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업 혁신의 방향이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현재 개발된 AI 에듀테크 활용학습은 자가학습 기반으로 수업 용도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기술 도입 그 자체가 교육혁신을 담보한다고 기대하기는 무리임.

10대 주제	주요 세부 주제(평가)	평가 기준					종합 평점
		1.입시 경쟁 고통 해결	2.사교육비 경감	3.교육 격차 해소	4.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기타	
2. 학교 교육력 제고	▣ 프로젝트 수업 등 교실 수업 혁신	B	B	B	A		B
	▣ IB 교육프로그램 확산	C	C	D	A		C
	▣ 내신 절대평가	B	B	B	A		B
	▣ 수능 상대평가	E	E	E	E		E
	▣ 글로벌 외교, 다양한 일반고 등	E	E	E	D		E
	▣ 고교학점제	C	C	B	A		B
	▣ 항목 간 연계 효과 (위 5개 세부 정책이 연계될 때 나타난 통합 효과)	D	D	D	B		D
평가 세부	▲프로젝트 수업 등 교실 수업 혁신은 미래 사회 대비 측면에서 매우 타당						

설명

한 정책이며 사교육비 경감이나 격차 해소에서 주요한 정책이라 판단함. 다만, 구체적인 교실 수업 혁신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프로젝트 수업 등 교실 수업 혁신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시 체제 변화와 맞물려야만 함. 현 교육부의 정책 기조 중에 유난히 수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음. 일단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임. 다만 수업 혁신의 핵심을 살펴보면,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속에 상당 부분 강력하게 담겨 있음.

□ IB 프로그램 도입 관련

▲IB 프로그램이 초등과 중학교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음. 문제는 이것이 고교 단계에 적용될 때인데, 이때 장기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그렇지 않을 경우 IB가 미래교육 대비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와 대학 입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 먼저 고교체제와 관련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펼친 자사고 외고 정책 등으로 청문회 단계에서 수직적 고교 서열화를 만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오히려 고교 서열화가 아니라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고교 서열화된 학교 속에서 charter school 등 미국 영국 등의 사례로 교육(수업)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 유형을 넣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렇게 될 경우 일반학교 내에서 학교 유형이 다시 분화될 것임. 여기에 외고에 대해서는 현재의 외국어 전문학교가 아니라 글로벌 학교 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내 입시 중심 외고와 외국 유학을 중심으로 한 국제학교 성격의 외고로 나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이때 글로벌 외고의 교육과정은 당연히 IB 과정이 될 것임. 또한 교육청 별로 진행되는 IB 학교들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현재 과학중점 학교처럼 일반학교에 IB반을 운영하는 학교 형태를 장려할 것임. 현재의 6~7단계 고교서열 체제가 IB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서 단계별 횡적으로 다시 분화되어 일반고 중 IB 전문 일반학교와 그렇지 않은 고교, 자사고 중에서 IB와 비IB, 외고 중에서 IB와 비IB 등으로 나뉘질 것으로 예상됨.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국내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둔 IB 학교들로서, 현재 수능 중 학종 전형의 트랙을 활용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입 조치(▲ IB 시험을 수능 점수와 같이 대학입시에 인정함, ▲대학 정원 외 전형으로 IB 교육과정 이수 평가 인정, ▲ 학종 수시 전형 과정에 반영 등)를 취할 가능성이 큼. 무엇보다도 대학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할 경우, 자연스럽게 이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됨. 만약 이렇게 IB학교와 IB 과정에 대한 대학의 특혜가 주어질 경우 고교 서열이 더 세분화, 세련화될 것으로 보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IB가 KB로 전환되어야 하나, 단기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KB라는 것은 우리나라 수능시험을 IB식 평가, 즉 꺼내는 교육을 장려하는 '획일적 정답이 없는 논·서술 평가 방식'으로 바뀌고, 그 평가의 책임을 스위스 IBO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부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에 대한 준비가 전무함. 만일 IB에서 KB로의 변화가 되려면 혁신 교육이 도입되면서 혁신교육관 대입제도 설계도 시작했어야 하는데 평가의 공정성, 신뢰도 등에서 이 난관을 돌파하지 못하여 혁신교육도 멈춘 상태임.

▲그래서 현재 IB 도입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KB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이행 전략을 내놓지 못한 채 IB의 확대만 주장하고 있는 형편임. 그러면 결국 현재의 대입 체제를 유지하면서 IB 학교의 국내 대학 입시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정도의 정책 변화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현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의 자율권 확대와 맞물릴 경우 IB 고교는 대학 입시에서 날개를 달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년 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최악이라고 평가를 한 바 있음. IB 학교는 유학 전용 교육과정과 평가 제도이고, 꺼내는 교육이라는 좋은 취지이긴 하나 사실상 문화 자본이 형성된 가정이나 계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육 방식임은 분명함.

▲외국의 IB 적용 학교들의 상황을 보면, 귀족학교 교육의 특징이 강함. 우리의 경우에도 이 과정 운영에 드는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처음 도입될 때는 경기외고, 천안삼성고 같은 돈 있는 자사고나 외고 등만 운영이 가능한 실정이었음. 제주 표선고등학교와 같은 예외적인 사례처럼 낙후지역 고교에 IB를 적용하여 학교와 지역을 살리는 경우도 있으나, 문제는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금이 언제까지 지속되기는 어렵기 마련이고, 따라서 나중에는 자체 재력이 있는 특권 학교들만 살아남아 IB 교육을 하면서 낙후지역의 IB 고교가 열어놓은 대입시 유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우려 사항임. 꺼내는 교육이라는 명분 속에서 문제의 질이 좋다, 교육의 질이 좋다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현 체제 속에서 확대될 때 ▲우리의 공교육의 과정을 외국 민간 기구인 IBO의 관리 속에 두는 교육 주권의 문제, ▲나라 바깥의 민간 교육기관인 IBO가 한국 교사들의 성장 연수를 책임지는 기형적인 구조, ▲IB 교육과정이 기존의 혁신 교육이나 수업 혁신과 부딪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혁신 교육의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로 악용되어 혁신 교육이 퇴조되는 문제(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미 나타나는 문제) 등은 또 다른 문제임.

▲IB 교육 프로그램은 미래 사회 역량 함양, 국제적으로 공인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인 것은 분명하나, 한국의 입시 체제와 고교 서열 체제 속에서 악용될 여지도 분명함. 즉 IB는 ‘양면의 칼’과 같은 제도이므로 교육부는 KB(논·서술형 평가체제) 도입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것에 주력해야 하고, 학교 서열화, 귀족 교육화가 되지 않도록 어려운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정해진 전체 숫자(KB체제로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안에서 한시적 운영이 필요함. IB 도입 학교에 특화된 영어, 논술 고액 사교육 시장 개막 가능성이 있으며, IB는 교육 방법과 수준이 문화자본과 학업 역량이 높은 대상으로 개발되어 난이도와 학업 부담이 존재하며, 교육부나 교육청 단위의 탑다운 정책이 아닌 단위 학교 차원의 자율적 도입이 필요함.

□ 내신 절대평가 관련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4개 평가 기준에도 모두 타당성이 높은 정책이나, A~E로 평가하는 성취평가제 하에서도 경쟁과 사교육, 입시의 문제는 상존하며, 고교 서열화 해소, 수능 절대평가제 전환, 내신 절대평가 신뢰성 확보 방안 등의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과 맞물릴 때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임. 더불어 교사 간 평정 불일치 문제 해소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 성취수준별 표준문항 DB 구축이 필요함.

□ 수능 상대평가

▲수능 상대평가,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 기조는 현재 한국교육의 교육고통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기에 4대 평가 기준에서 모두 매우 타당성이 부족한 정책임.

□ 자사고, 특목고 등 존치

▲자사고 존치는 초중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증가와 입시경쟁 강화를 불러올 것이며,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와 맞물리면 학교 다양화가 아닌 학교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전국단위 자사고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는 학교 서열화의 폐단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수준의 면피용 정책에 불과함. 다양한 일반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현행 자사고, 특목고 중심의 고교 서열체제는 폐지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선발권을 회수하여 동일한 경쟁 아래서 특목고 자사고의 역량을 입증해야 할 것임. 다만 다양한 형태의 일반고는 입시 종속성을 넘어 설 수 있다면 다양한 교육과정과 빛깔 있는 교육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 고교 서열체제의 유지는 필연적으로 학생의 선택에 의한 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해서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고교 학점제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 선택의 왜곡이 없도록 모든 과목 절대평가 도입이 절실하며 현재처럼 공통과목 상대평가 존치 시 고1 내신 조기 사교육 가열 가능성이 여전할 것임. 학점제를 입시몰입 교육과정으로 운영(국영수,심화 과목)하는 부작용 방어책 마련, 책임 교육을 위한 미이수제 실가동, 학교 간 과목개설 격차 최소화를 위한 공동교육과정 전폭적 지원, 학생별 진로 교육과정 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교사 전문성 연수와 지원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함. 또한 다과목 지도 과부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인력 지원 필요 등의 추가 보완이 있어야 고교 학점제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는 토대가 될 것임.

□ 항목 간 연계 효과

▲자사고 존치 상태에서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내신 절대평가 변화는 엇박자 정책으로 입시경쟁 고통 해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또한 IB 정책이 교육부

의 종합 계획 안에서 작동하지 않고 시도별 교육청 차원에서 경쟁적, 속도전으로 치다를 경우 미래교육 대비 효과나 사교육 경감 효과도 제한적일 것임. 대입체제 변화 없는 고교학점제, 자사고 유지 상태에서의 고교학점제는 고교학점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함. 또한 IB 정책과 맞물릴 경우, IB 운영 자사고, IB 미운영 자사고, IB 운영 일반고, IB 미운영 일반고 등으로 학교 서열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음.

▲종합해 보면, 교육과정의 다양화는 필요하나 학교 형태의 다양화는 지양되어야 함. 평가체제는 앞으로 ‘학점제’를 유지하면서 내신은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이라 발표함. 그러나 2028학년도 대학입시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현 정부 임기 밖의 일이라는 입장임. 따라서 내신이 절대평가가 된다 하더라도 수능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한 내신 절대평가 효과는 미미할 것임. 고교 체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학교 유형을 다시 나누게 될 경우, 기존의 학교 서열체제가 다시 분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임.

□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학교 교육력 제고 내 세부 정책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 연계 상승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가 필요함.

1)IB 교육과정은 초중고를 중심으로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다만 기존의 혁신 교육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혁신 교육의 계승·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이를 위해서는 IB 교육을 고교 과정에 적용 및 확대하기에 앞서 KB 전환 가능성 및 전략을 면밀하게 따지고 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함. (\*KB라 함은 IBO와는 별개로 한국의 주체적 교육 철학에 근거하여, ‘열린 교육, 꺼내는 교육’에 맞는 교육 내용, 수업 방식, 평가 방식(내신과 국가시험)을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3)내신은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2025년에 예정된 자사고 및 국제고 외고 등을 폐지하여 절대평가로 이익을 보는 특정 학교군을 없애야 하며, 최소한 현재의 고교체제를 존치한다 해도 선발권을 없애고 희망자 중심의 완전추첨제로 전환해야 함.

4)고교 학점제 도입, 수업의 질 개선, 입시경쟁 고통 완화 등을 생각해서 내신을 절대평가제도로 운영한다면, 수능의 절대평가제 도입을 추진해야 함.

10대 주제	주요 세부	평가 기준	종합
--------	-------	-------	----

		주제(평가)	1.입시 경쟁 고통 해결	2.사교육비 경감	3.교육 격차 해소	4.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기타	평점
3.교사 혁신 지원 체제 마련	3-1.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 마련</li> </ul>	1.교원 기본 교육역량 강화	2.현행 임용체제 개선	3.현장 교육과 실질적 연계	4.미래 교육 역량 강화		<b>C</b>
	3-2. 교사혁신지원 체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행정 업무경감</li> <li>▣ 교원 연수 및 인사제도 개선</li> <li>▣ 미래 필수 역량 함양의 디지털 교육</li> </ul>	■	■	■	<b>C</b>	<b>C</b>	
<b>평가 세부 설명</b>		<p>교원전문대학원 정책에 한하여 교원기본역량 강화, 현행 임용체제 개선, 현장 교육과의 실질적 연계, 미래교육 역량 강화 등의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함.</p> <p>▲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이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23년 3월 발표 예정)과 맞물려 양성 인원 적정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등 임용 경쟁률이 8:1이 넘는 상황에서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는 막대한 행·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예비 교원의 임용 경쟁 고통을 지속시킬 수 있음. 또한 4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교사 자격을 5, 6년으로 연장할 경우 예비교사들이 부담할 학비 등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어 교육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고, 우수 인력의 유입도 줄어들 것임. 그러나 학업 기간이 늘어난 만큼 관련 교수들의 이해관계는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음. 따라서 양성 인원 적정화 없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은 현행 임용체제 개선의 효과가 크지 못함.</p> <p>▲또한 교원 기본역량 강화, 현장 교육과의 실질적 연계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행 교대, 사대 교육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교수로 파견되는 등의 실제적인 현장 교육 강화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장 교육과의 실질적 연계 측면도 한계가 분명할 것임.</p>						

	<p>▲미래 교육 역량 강화 면에서는 실습기간 연장, 연구 역량과 미래교육 역량을 담보한 교·사대 교육과정 변화 필요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됨.</p> <p>▲종합해 보면,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는 현재 교육대학교 사범대학의 문제(현장 교육과 유리된 아류 전공 교육, 현장 교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의 경험을 토대로 2년간의 교직 실무 과정 습득 등)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나름 일정한 의미를 갖음. 다만 대학원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과 대학원 정원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 현장 교육에 유익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 인력 배치(현장 교사 경력자들 중 학위를 가진 자들 중심의 운영), 교대, 사대 학부 과정 없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대학원 체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서, 이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p> <p>▲한편,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 행정 업무 경감, 교원 연수 인사 제도, 교사 디지털 교육 정책은 입시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와 무관하다 할 수는 없지만, 직결되는 문제라 볼 수는 없어 ‘관련 없음’으로 표현함. 다만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제고 면에서 3-2 정책은 그 타당성이 있는 정책임. 그러나 현재 발표된 교육활동 강화 방안 중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한 것은 교육의 질 제고가 아닌 교육 갈등만 증폭시킬 우려가 매우 높으며, 미래 필수 역량 함양의 디지털 교육 정책도 정작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내용에는 모두 AI, 디지털 역량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p>
--	--

10대 주제	주요 세부 주제(평가)	평가 기준					종합 평점
		1.입시 경쟁 고통 해결	2.사교육비 경감	3.교육 격차 해소	4.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기타	
4. 유보통합 추진	▣ 유보통합 추진	·	C	A	A		B

평가 세부 설명	<p>▲지난 대선 과정에서 진보, 보수 후보 모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천명한 바 있음. 이주호 장관 들어서 그 중심은 유지하면서 2025년 1월 유보통합을 진행하기로 함.</p> <p>▲유보통합 정책은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타당성 있는 정책임. 또한 미래 사회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시대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타당성 높은 과제임. 교육부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질 높은 보육과 교육 체제를 만든다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p>
----------	---



	<p>도 가져올 수 있음. 다만 학부모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 또 다른 영유아 사교육비 증가가 아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리고 질 높은 통합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들 예산 확보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또한 자격 체제에 있어 영아(0~2세)와 유아(3~5세) 전문적 지원을 위한 전문 자격 체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자격 취득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 확보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함.</p>
--	---

10대 주제	주요 세부 주제(평가)	평가 기준					종합 평점
		1.입시 경쟁 고통 해결	2.사교육비 경감	3.교육 격차 해소	4.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기타	
5. 늘봄학교 추진	▣ 늘봄학교 추진	.	<b>B</b>	<b>B</b>	<b>C</b>		<b>B</b>

<p>평가 세부 설명</p>	<p>▲늘봄학교 운영으로 돌봄의 대상과 시간이 확대된다면 수업 후 학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어 사교육 감축이 가능하며, 교육격차 해소 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늘봄학교에 참여함으로써 물리적인 사교육 참여 시간이 줄어들고, 학교 프로그램도 사교육이기는 하나 비용 부담이 적기에 긍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늘봄학교 정책은 미래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된 정책이므로 질 높은 돌봄이 운영된다면 교육의 질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임.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한 미래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임. 그러나 돌봄 대상과 시간이 늘어난 만큼 이를 위한 단위학교 인력과 예산 지원 방안이 필요함. 그렇지 않고서는 돌봄의 질은 올라가고 정규 수업의 질은 떨어지는 모순 상황이 발생할 것임.</p> <p>▲3% 시범운영뿐 아니라 보편적 운영에 있어서도 재정과 인력 지원 뒷받침이 필요함.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인력 지원, 담당 전담사의 노동 환경 개선 필요. 지역단위 전담운영체제는 거점형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에 맞춰 있는 사례일 뿐, 아침돌봄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학교 업무량 증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음. 돌봄유형이 다양화 되고 대상과 시간이 늘어난 것에 비해 단위학교 지원책은 미비함.</p> <p>▲3% 시범학교 수준이 아닌 전국 단위 일반화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보완이 이뤄진다면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미래 사회 대비 측면에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p> <p>▲가장 좋은 돌봄 정책은 학생을 장기간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환경을 변화시켜 적절한 사회적 돌봄과 부모의 양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p>
-----------------	--

	임. 따라서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의 위상으로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부모의 돌봄 휴가 및 단축 근무를 제도화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

10대 주제	주요 세부 주제(평가)	평가 기준					종합 평점	
		1.입시 경쟁 고통 해결	2.사교육비 경감	3.교육 격차 해소	4.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기타		
6. 과감한 규제 혁신·권한 이양 및 대학 구조 개혁	6-1. 대학 규제 개선 및 구조개혁	■ (대학) 대학 정원·학사·재정 운영에 대한 규제 과감히 제거	.	.	E	E		E
	6-2. 고등외국교육기관 설패 등 권한 지방이양 추진	■ (대학)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패 승인 등 권한 이양	D	D	E	E		E
	6-3. 교육자유특구	■ (초중고) 학교설립~운영 교육 규제 완화, 지역별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E	E	E	E		E

<b>평가 세부 설명</b>	<p>▲대학 교육 환경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 무분별한 규제철폐로 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대학 정원, 학사, 재정 운영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한다고 했는데, 제거할 규제와 유지해야 할 규제가 있음. '교육여건'(강의실, 교수 1인당 학생 수, 도서관 책 수)과 '교육의 질'(교수의 역량, 수업 만족도, 연구 성과 등), '교육 재정'(인건비,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 투자 등)에 대한 관리는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국가 수준의 관심 영역이어야 할 과제인데, 이런 책무성을 내려놓을 경우에 대학 교육의 질은 기대할 수 없음. 대학의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 신규 캠퍼스 설치 등의 자율권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 현상</p>
-----------------	---

과 인기 학과 중심의 학과 재개편으로 이뤄질 경우 입시경쟁 고통 해결,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문제는 현재에서 개선될 여지가 없음.

▲사립대학의 방만한 경영을 제한해 왔던 각종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규정을 한꺼번에 없애면 안 될 것임. 대학의 자율권을 어떤 대학에 줄 건지 반드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정책임.

▲고등외국교육기관 설패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유치와 설립 심사가 지방 정부로 일원화 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으나, 지역 간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외국인 정주 여건 향상이라는 목표보다는 지역 간 고등외국교육기관 유치 경쟁이 강화될 수 있고, 교육부 차원의 일괄 관리가 어려워져 또 다른 대학 서열 체제와 경쟁을 강화할 수 있음. 이는 초중등 국제학교가 국제학교로서의 기능보다 내국인 소수 귀족교육화 된 것과 같은 제도로 정착될 우려가 있음.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권한 이양은 지역대학 살리기로 이어질 수 없는 정책임. 이미 고등교육 인프라가 수도권 쏠림이 심각해 중앙 정부 차원의 과감한 목적성 지원이 있어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치는 이미 실패 수순을 밟고 있음.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신입생 모집 결과 충원율이 82.2%에 불과함. 해당 캠퍼스에 입주한 대학이 세계적인 유수의 대학이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국내 대학에 밀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2011년에 개교한 부산 진해독일FAU는 2019년에 폐교 수순을 밟았고, 2008년에 개교한 광양만 네덜란드 물류대도 2013년에 폐교했음. 이처럼 정부 주도의 과감한 목적성 지원이 없이 지방에 외국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것은 폐교대학을 우후죽순으로 난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교육자유특구가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지역 내 또 다른 학교 서열체제를 만들어 낼 우려가 있음. 지역 인구 소멸 방지책으로 만들어지는 교육특구 내 학교가 타 지역 학생 유입으로 지역 자체 학생들의 진학의 문은 좁아지고, 타 지역 유입 학생은 학교 졸업 후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일이 반복됨. 이럴 경우 입시 경쟁은 가중되고, 사교육비는 증가할 것이며, 교육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음.

▲대학의 경제 특구 속 대학 설패 권한 이양 및 초중고의 지역별 교육 자유 특구 지정 운영은 또 다른 특권 교육 트랙을 만드는 것으로, 해당 대학과 초중고 학교 진학을 둘러싼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증가, 학교의 입시학원화를 부채질할 우려가 큼. 대학 설패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유지해야 함.

▲윤석열 정부가 선언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학구조개혁이 추진되려면 지

	역대학과 지역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설계와 과감한 지역 대학 중심의 투자정책이 제시되고 추진되어야 함.
--	--

10대 주제	주요 세부 주제(평가)	평가 기준					종합 평점
		1.입시 경쟁 고통 해결	2.사교육비 경감	3.교육 격차 해소	4.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기타	
7.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구축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	.	.	C	C		C

<b>평가 세부 설명</b>	<p>▲지역발전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해 인재 양성이 취업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임. 그러나 단순히 대학 정책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는 방안은 불평등한 교육여건을 방관하고,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될 수 있음. 지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갖고 지역 대학의 혁신을 유도할 때, 자칫 지자체가 이에 대해 교육적 중심을 잡기 어렵고, 지방 산업과 연계해서 특성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할 때 지역별 특성화 교육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지역 균형 발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제한 규제를 풀어주는 대학 정책 자율화를 펼칠 경우, 지역 대학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만들 것.</p> <p>▲따라서 이 과제를 지자체에 넘기기보다는 국가 수준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큰 청사진 속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고등교육 재편 논의를 진행해야 함이 타당함. 즉,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 수도권 집중 현상의 해소, 고교 입시 경쟁의 완화, 미래 교육’ 등의 관점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지방대를 포함해 국가 수준의 대학 체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그 안에서 지역대학 희생의 보다 담대한 플랜을 제시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해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제시한 ‘대학입학보장제’, ‘좋은 대학 100플랜’ 등을 검토할 것을 추천함.</p>
-----------------	--

10대 주제	주요 세부 주제(평가)	평가 기준					종합 평점
		1.입시 경쟁 고통 해결	2.사교육비 경감	3.교육 격차 해소	4.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기타	

					질 향상	
8. 학교 시설 복합화 지원	▣ 학교 시설 복합화 지원	·	·	·	·	▣ 관계 없음

평가 세부 설명	<p>▲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지역사회 내 공공성을 높여가는 것은 공감할 수 있으나, 4대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하기에는 직접성 관련성이 부족한 정책이라 판단해 ‘관계 없음’으로 평가함.</p> <p>▲다만 시설 복합화 정책 추진 시 학교 입장에서 관리와 운영 면에서 학습권 침해 예방과 보장, 학생 안전 사항 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세심한 정책 진행이 필요함. 아울러,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의 방향성이 돌봄 및 방과후 공간 마련, 어린이·청소년 체육시설, 문화시설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안전한 돌봄과 방과후 수업 시 시설 활용 면에서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화에만 맞춰진다면 오히려 학생 교육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이 두 관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함.</p>
-------------	---

10대 주제	주요 세부 주제(평가)	평가 기준					종합 평점
		1.입시 경쟁 고통 해결	2.사교 육비 경감	3.교육 격차 해소	4.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기타	
9. 첨단분야 인재 육성 및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신속 대응하는 교육	·	D	·	D		D

평가 세부 설명	<p>▲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지방대학 시대 정책에 연계해 지방대에 학생이 많이 갈 수 있는 유인책 마련 필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이 수도권 지역 대학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오히려 지방대학과의 격차를 더 유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첨단분야 인재 육성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정책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음.</p> <p>▲교육부는 작년 7월 반도체 인재를 10년간 15만 명을 양성하겠다 발표하면서 향후 반도체 인력이 12.7만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음. 전망 근거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반도체 회사들이 만든 협회)의 ‘향후 10년 반도체산업 인력 전망’을 토대로 했는데, 협회는 향후 10년 동안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을 5.6%, 매출액은 연평균 6.2% 증가한다 전망했음. 그러나 이는 반도체 업체들의 기대 이익을 반영한 지나친 장밋빛 예상임.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도 마</p>
-------------	---

	<p>찬가지로 정부의 관련 인재 예측 추계가 과대화 되어 있음. 첨단분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지 대학 졸업생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전부라 될 수는 없음.</p> <p>▲명확한 분석과 생태계 구축이라는 대책 없이 첨단분야 대학 전공 및 정원 확대 시그널이 오히려 초중고의 AI, 코딩 관련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부작용을 고려한 정책의 정확한 로드맵 제시가 선결되어야 함.</p>
--	---

10대 주제	주요 세부 주제(평가)	평가 기준					종합 평점
		1.입시 경쟁 고통 해결	2.사교육비 경감	3.교육 격차 해소	4.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기타	
10. 4대 교육개혁 입법	☐ 러닝메이트법	D	D	D	D		D
	☐ 교육자유특구법	-	-	-	-		6-3 평가로 대신함.
	☐ 고등교육법	-	-	-	-		6-1 평가로 대신함.
	☐ 사립학교법	-	-	-	-		6-1 평가로 대신함.

평가 세부 설명	<p>▲교육부의 고등교육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이에 맞춰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행·재정적으로 일원화하려는 정책들이 10대 정책에 다수 포함됨. 그러나 고등교육 관련 권한의 지방 정부 이양과 러닝메이트제 연동은 행정의 효율성은 있을지언정 교육자치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음. 교육은 효율의 잣대로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임.</p> <p>▲사회적 요구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인데 러닝메이트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음. KEDI(2021.8.16.~9.10) 4천 명 설문 결과 교육감 직선제 찬성 42.6%, 반대 27.8%에서 보듯 유권자들은 직접민주주의 요구가 더 강함. 따라서 직선제 하에 발생하는 교육감 선거비 문제나 유권자 무관심, 후보 난립 문제 등 보완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직선제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됨. 지자체 단체장 러닝메이트제도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낼 것이고 교육 자치가 크게 훼손될 것임. 또한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의제 자체가 문힐 가능성이 더 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불일치도 견제와 균형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가는 민주주의 과정으로 봐야 할 것임.</p> <p>▲현재의 러닝메이트제 논의는 교육정책을 정치권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영향력</p>
----------	--

아래에 두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 정치권의 교육 문제 해결 능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광역자치단체장의 인기영합주의 교육정책 사례(자사고, 특목고, 자유특구 유치 등으로 입시 고통과 사교육 고통을 가중시키고 교육격차를 유발함.) 등 부작용이 더 컸던 것을 볼 때 교육정책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 명확함.

▲교육감직선제가 러닝메이트제에 비해 교육 자치의 자율성이 훨씬 크므로, 지역별 맞춤과 자율에 입각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쳐갈 수 있는 바,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면에서 러닝메이트제는 그 타당성이 부족한 정책임.